

# ‘장애인 보조금·연구비는 삼짓돈?’ ... 광주 횡령 기승

### 장애인보조금 20억원 편취 지역혁신사업 보조금 횡령 부정수급자 1600여명 적발 적발 액수 전년比 500% ↑

국가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탓에 광주지역에서 이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장애인들을 위해 책정된 보조금 20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구속) 등 4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자녀 명의로 나오는 정부 돌봄 서비스 보조금을 빼돌렸다. ‘바우처 카드’로 단말기에 활동보조사 근무 시

간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악용해 빼돌린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9월 까지 10여 년간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꾸며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총 20여억원 상당을 나눠 가졌다. 이중 11억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활동지원사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은 각각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급여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활동지원사의 휴대용 단말기에 인식시킨 뒤 근무 시간을 입력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를 근거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산정해 활동지원기관에 비용을 송금하는데, 활동지원기관은

이 비용의 25%는 기관 운영 자금으로, 나머지 75%는 활동지원사에게 인건비로 지급한다.

A씨는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였고, 기초단체가 지정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관리책임자 등과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나누기로 공모해 범행했다. A씨는 이렇게 편취한 금액을 강원도 카지노 등에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보조금 편취 범죄는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26일에는 유령직원 등록해 정부 보조금 30억을 빼돌린 광주 지역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업체 P사 대표 B(45)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9~2020년 기존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유령직원을 등록해 국방과학기술품질원과 산업기술품질평가원 등 3곳에서 정부보조금으

로 지원받은 인건비를 빼돌렸다.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 거점사업단을 운영하며 30여대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남대 교수 등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대학·기업·지자체(산·학·관)가 사업단으로 참여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일환인 2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36억원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뿐만이 아니다. 국가보조금 횡령은 전국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범은 653명으로 2011년 453명에 비해 44.2%나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9건·1620명이 검

거되고 24명이 구속됐다. 부정수급액은 총 1372억600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증가했다.

전문가는 검증 시스템을 지적한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연구자들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국가적으로 쉽게 감지하기 어렵다”며 “건전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역이용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 담당자가 청렴하더라도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대로 감사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며 “인사이드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전문 영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 한양 “중앙공원 시공사 지위, 행정소송서 규명될 것”

한양이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민사) 상고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이는 사인 간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양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빛고을 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빛고을SPC)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 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이는 사인 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양은 광주시를 상대로 시공사지위 확인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선 1심에서는 한양이 패소했다. 한양은 행정소송 2심 재판 과정에 특정 증인이 광주시에 불리한 결정적 증언을 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을 한양 30%·우빈산업 25%·케이앤지스틸 24%·파크원 21%로 꾸려졌다. 이후 한양과 이른바 비 한양파로 나누어져 양자간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비 한양파인 빛고을SPC가 롯데건설(주)과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사업 도급 약정을 체결하

면서 갈등은 극에 다다랐다.

한양은 독점적인 시공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은 소송에서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상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한양이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사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1·2심(민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협약·제안서·정관 모두 시공사 선정 방법·권한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사업 제안서에 시공자나 시공 능력 여부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 한양이 시공사로서 법적 보호 가치를 형성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한양에 시공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양은 대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고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송민섭 기자

##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중앙경찰학교장 직위해제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검경 사건 브로커’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중앙경찰학교장이 직위해제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중앙경찰학교장인 김모(58)치안감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김 치안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진 데 따른 조치다.

김 치안감은 지난 2021~2022년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충북 충주시 소재의 중앙경찰학교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광주지검은 사건 브로커 성모(61)씨를 구속기소한 뒤 전·현직 검찰,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김치안감을 대상으로 1차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후 브로커 성씨와 관계된 전·현직 고위경찰관들, 인사부서 담당자, 인사위원회 위원, 승진 대상자 등도 참고인으로 조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대 출신인 김 치안감은 2017~2018년 광주경찰청 부장(경무관) 근무 시절 대학 선배인 임모 전 총경(현 공기업 자회사 대표)으로부터 브로커 성씨를 소

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 치안감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이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 치안감 재임 시절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정급 이하 승진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검경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 3명이 구속기소된 상태다. 송민섭 기자

## ‘통신선 훼손’ 상무지구 일대 통신 오류... 긴급 복구

광주 일부 지역에 KT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서 반나절 동안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27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서 KT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화정동 하수관로 정비 공사 중 작업자가 광케이블을 건드린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식당, 카페 등 상가에서 결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업무에 마비가 생기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양동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마모(25)씨는 “오후부터 회사 네트워크와 전자결제



문서 등 모든 작업이 되지 않아 당황했다. 처음엔 사무실 내부 문제인 줄 알았는데 KT 측에서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줬다”며 “업무가 울 스톱 됐다. 작성 중인 보고

서가 잘 저장됐는지 다들 불안해한다. 복구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할 걸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KT 측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 복구 작업은 다섯 시간 만인 오후 6시에 완료됐다.

KT 관계자는 “피해 보상 등은 추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오후 3시에 재난 안전문자를 통해 ‘상무지구 일대 KT 통신장애 발생으로 일부 인터넷 회선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다. 강주비 기자



**사랑의 온도탑**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30도를 나타내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50억7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된다. 김양배 기자

## 신생아 딸 살해 친모, 살인죄로 구속기소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 A(25)씨가 법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27일 딸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친모 A(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께 서구 금동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베란다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A씨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홧김에 딸을 주머니에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영아·아동 대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